

‘세계수영’ 예산 못주겠다는 정부 국제대회 국비지원까지 호남 차별

대구육상 32%·청주조정 31% 지원 ... 광주는 24% 그나마 “불가”

정부가 오는 2019년 광주에서 열릴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이하 세계수영대회) 예산 지원 불가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부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하 지원법) 적용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5년 사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된 국제경기대회 전체 사업비 중 25~32% 가량이 국비로 지원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정부 문서 위조’ 논란을 이유로 사실상 ‘호남 차별’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새해 예산안 최종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세계수영대회 지원 예산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광주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광주 서구을)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가 유치한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범으로 명시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지난해 6월 개정됐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는 올림픽대회와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축구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원법에 따라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 2014 인천 아시안게임,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의 전체 사업비 중 25%에서 많게는 30%이상까지 국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광주시가 세계수영대회 개최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46억원의 국비 예산

■ 주요 국제대회 국비지원 비교

대회	전체사업비	국비지원(비중)
2011 대구 세계육상	3,572억	1,154억(32.3%)
2013 충주 세계조정	975억	300억(30.9%)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4,979억	1,259억(25.3%)
2019 광주 세계수영	1,149억	278억(24.2%) “지원불가”

편성을 요청했음에도 정부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 광주시는 세계수영대회 전체 사업비 중 24.2%의 국비 지원을 받을 계획이었다. 이런 가운데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9일 ‘공문서 위조 논란’을 명분으로 내세워 정부의 세계수영대회 지원 불

가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세계수영대회 지원 불가 방침은 사실상 정부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지역 차별’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6월 개정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정부가 승인한 대회로 한다’는 내용의 부칙까지 명시돼 있다.

박혜자 의원은 “정부 공문서 위조 논란은 지원법이 개정되기 전인 1년 전인 2013년 4월에 있었고, 곧바로 시정돼 유지신청서 중간본과 최종본에는 정부 보증서 원본을 제출해 유지한 대회여서 위조 논란은 완전히 해소됐다”면서 “따라서 국회 예정소위에서 반드시 세계수영대회에 대한 국비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국회의원 ‘8석’ 유지되나

광주 동구 선거구 남구와 합쳐
동남갑·동남을로 획정 가능성
국회정개특위 의견 접근

‘호남 정치 1번지’로 불리는 광주시 동구가 남구와 합쳐진 뒤 동남갑·동남을 두 개의 선거구로 19대 총선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이 안대로 선거구가 최종 확정된다면 동구 선거구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 선거수(8석)도 현행에 유지하게 된다.

다만 분구(分區) 대상 지역 총선 주자와 주민들은 저마다 이유를 들어 불가 입장을 보이는 등 국회 선거구 확정위원회 최종 결정안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기사 4면>

19일 국회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4+4 회동’에서 영·호남 지역구를 2석씩 줄이는 데 잠정적인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3석 이상씩 감축이 논의됐지만 통합 창당시에 특례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영남 감축 대상이 2석으로 줄었고 이에 대응해 광주 동구 선거구도 존속시키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구가 9만9641명인 동구는 북구 갑·남구와 인접한 선거구인데, 북구 갑과

합할 경우 인구 30만 명 이상 선거구는 분구의 요건을 채우지 못 한다. 반면 동구가 남구와 합해지면 인구가 30만 명이 넘어 분구가 되면서 광주의 현행 의원 정수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정치권에선 남구 분선 2동과 방림·양림동이 동구에 편입돼 동남갑 선거구가 되고, 나머지 남구 지역은 동남을로 조정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내년 총선에 남구로 출마할 후보자들은 이 같은 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남구의 성장 동력은 교육·경제·문화인데, 교육과 문화의 주축인 분선동과 방림·양림동이 동구로 조정될 경우 지역발전의 축을 잃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거주지는 남구인데, 선거에서는 실질적으로 동구 후보를 선출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남구 출마예정자인 정진욱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동남갑과 동남을로 선거구를 나눌 경우 실제 동구 지역구 인구는 15만명, 남구는 14만명으로 줄게 되면서 주축이 바뀌게 된다”면서 “(이 안대로 확정될 경우) 남구의 발전 동력은 크게 약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大法 “대형마트 영업제한 적법”

지자체와 법적분쟁 마무리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형마트 규제의 위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판결에 따라 2012년부터 이어진 지자체와 유통업계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10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 동대문

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보호할 필요도 큰 반면 대형마트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 등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들이 규제에 앞서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쳤고 공익과 사익의 여러 요소를 실질적으로 고려했다”며 영업제한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대형마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이홍재의 세상만사 ▶ 2면



신 팔도유람 - 雪國 강원 ▶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가톨릭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10년만에 불빛한 문화전당의 ‘심장’ 오는 25일 공식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옛 전남도청 본관, 별관)에 조명이 켜졌다. 민주평화교류원 주요 건물이 불을 밝힌 것은 지난 2005년 문화전당 착공 이후 10년만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유네스코 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위원회 사무국 문화전당에 내년 입주

문화전당 공식개관 D-5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유네스코 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위원회 사무국을 문화전당에 유치했다. <관련기사 2면>

유네스코 산하 기구가 광주·전남지역에 설치된 것은 처음으로, 문화전당이 아시아, 태평양권 기록유산 등재와 보존의 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

무대리 방선규)에 따르면 최근 유네스코 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위원회 이사회가 유네스코 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위원회(MoWCAP) 사무국을 문화전당에 두는 것을 의결했다. 문화전당측은 오는

12월에 사무국 규모와 상주인력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교환할 예정이다. 유네스코 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위원회 사무국은 내년 상반기 민주평화교류원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 사무국에서는 아시아 기록문화유산의 등재를 결정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위원회 우리 함께 광주시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시민 중심 행복미래
정부 3.0으로
열어갑니다.

정부 3.0이란?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모든 시정혁신 노력으로서, 정책의 전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입장에서 정책과 서비스를 만드는 시정개혁을 의미합니다.

시정이 보유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 공유하고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 협력하여 시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새로운 시정운영 패러다임

개방

시정을 알리면 신뢰가 쌓입니다!
신뢰받는 시정

- 공공데이터 개방
- 행정정보 공개

공유

함께 나누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나눔의 시정

- 나눔복지공동체
- 공유문화도시

시민의 행복에 가치를 더하다

광주광역시 정부 3.0

참여

함께 참여하면 희망을 만듭니다!
소통하는 시정

- 광주 마을자치공동체
- 광주형 일자리 만들기

협력

함께 합치면 유능해집니다!
협업하는 시정

- 광주·전남 상생발전
- 칸막이 없는 일하는 문화